

데스크사자



송기동 문화2부장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난 27일 오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려 표정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발포명령을 부인하느냐’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걸 의식했을까. 하여튼 재판 내내 좋다 까다를 반복하던 그는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뉘우침이나 참회 같은 건 없었다. 13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다시 선 전 씨는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광

‘전일빌딩 245’ 무수한 탄흔 남아 있건만

주 시민에게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샀을 뿐이다. 이날 광주법원 정문 앞에는 ‘전두환 단죄(斷罪) 동상’이 놓여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전 씨가 무릎을 꿇고 오라ژ돌에 묶인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실물 크기 조각상이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일명 ‘뽕망치’로 전 씨 동상 머리를 내리치며 가슴속 응어리를 풀기도 했다. 동상 측면에는 전 씨의 ‘죄악상’이 시간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동상은 시민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처음 설치됐다. 이번 재판 일정에 맞춰 광주로 옮겨진 동상은 전 씨에 대한 엄중 처벌과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한 피터슨 목사와 오 조비오 신부(2016년 신종)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5·18기념재단과 유족이 전 씨를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3월 첫 출석한 이후 전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는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온갖 핑수로 법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점심을 측근들과 먹는 모습이나 카메라에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헬기 사격의 결정적 증거는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전일빌딩 10층 실내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이다. 자칫 헛될 뻔한 위기에 놓였던 전일빌딩에서 광주시의 노력으로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물증을 찾아낼 수 있었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 전일빌딩 내·외부에서 245개의 총탄 자국이 조사됐고, 2019년 조사에서 25개의 총탄 자국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수에 따르면 10층 기둥과 창턱, 바닥에 남아 있는 탄흔 방향이 수평 또는 하향 각도인 것으로 보아 최소 10층(지상 31m) 이상의 높이에서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구체적으로는 UH-

1H 헬기가 호버링(제자리 비행)을 하며 동체에 장착된 M60 기관총으로 연발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역지 궤변으로 일관

전일빌딩은 과거 광주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이 자리해 광주·전남 언론 1번지로 불린다. 또한 도서관·미술관·다방 등도 있었던 문화공간이었다. 여기에 5·18 헬기 탄흔을 간직한 상징적인 건물인 전일빌딩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전일빌딩 245’로 다시 태어났다.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은 코로나19 여파로 개관을 연기해 오다 오는 5월 11일 문을 열기로 했다. 방문자들은 이제 총탄 자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왜곡된 5·18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발포명령자, 헬기 사격, 암매장 등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진압군의 ‘자위권 발동’ 논리의 허구를 깨뜨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원은 끝까지 ‘진실’을 깨내고, 역지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전 씨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21대 국회의 필수 과제



강대석 시민·행정학박사

제21대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대두된 문제점은 야당의 쟁수로 촉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왜곡, ‘떡볶이’ 논란을 부른 시대착오적 여성 추천 선거 보조금 제도, 35개나 되는 비례정당 난립 등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 확정된 희한한 선거구 획정을 지나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은 인구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투표 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별 상한 27만 3000명과 하한 13만 7000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과소 선거구의 통합합이 필연적이므로 거대 선거구 내지는 희한한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그 단적인 예가 순천시의 선거구였다. 인구 28만 6000명인 순천시는 자체적으로 온전한 2개의 선거구로 분할이 가능함에도 전남의 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해동면 지역을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킴으로써 순천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강원도 춘천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희한한 선거구 출현 이외에도 인구 과소 지역을 통합합함으로써 농촌을 대변하는 의원이 계속 줄어들다는 게 문제다. 호남의 경우만 해도 1996년 15대 국회(총원 299명, 지역구 253명, 비례 46명)에선 호남 의원이 37명이었으나 2016년 20대부터 28명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20년 사이 9명이나 줄어 그만큼 호남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

이다. 21대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수도권 의원만 121명(47.8%)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또한 수도권에서 한 개 자치단체에서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역이 6곳(부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안산)이나 되는 반면, 전국적으로 4개 시군이 모여 한 개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은 15곳(강릉5, 전남4, 경북2, 경남2, 충북1, 전북1)이나 되어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너무 대비된다. 일례로 장성·담양·영광·함평 선거구의 면적은 1840㎢으로 의원 49명을 뽑는 서울(605㎢)보다 3배나 넓고, 의원 4명을 뽑는 부천시(53㎢)보다 35배가 넓지만 의원 수는 겨우 한 명이다. 각종 법률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면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한 개 선거구의 면적이 최대 130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인구 밀도가 낮은 선거구의 경우 인구 편차 기준 ±25%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역 면적을 반영하여 적어도 한 개 선거구가 3개 시군 이상은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 필요가 있다. 농촌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안보의 주요 산업 기지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식량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촌이 소멸하지 않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많은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처럼 싸움만 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급하게 희한한 선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미리 논의를 거쳐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더 이상 농촌 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호남 지역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광주 정신은 세계적 자산



박용수 정치학박사·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국제 사회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코로나 수렁에 빠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국에 SOS를 청하는 중이니 그럴 만하다. 최근 미국에 유학 중인 친구 아들이 부모에게 급거 귀국 의사를 전해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해요. 엄청난 의료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제가 돌아갈 나라가 한국이랑 같 다행이고, 자랑스러워요.” 언제 우리가 미국이 부럽지 않게 됐는가. 아니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와야 안전하게 됐는가. 서양 우월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안에 내재돼 있던 서양에 대한 열등감도 포말처럼

사라지고 있다.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변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선진국 이상의 선도국으로 자리잡게 되리라는 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전망이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세계 질서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이보다 좋은 뉴스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적 역량이 그걸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19와 부마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등 피로 얼룩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잔인한 4월을 지나 정춘의 계절 5월을 맞는다, 그러나 인류 문명이 온통 코로나 위험 앞에 정지돼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다. 해마다 금남로와 5·18 광장에서 펼쳐졌던 시민 집회의 열기를 접할 수 없어 무엇보다 아쉽다. 그렇다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해 줄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는 ‘광주 정신의 도시’다. 광주는

도시 이름에 정신이 붙은 유일한 도시다. 광주 정신은 역사 속에서 분출된 민주, 인권, 평화 정신으로 집약된다.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 주먹밥과 현혈로 이뤄낸 대동 평화 세상이다. ‘광주 정신’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학살 만행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분출돼 그 빛을 발했다. 공권력이 철수한 상황에서 앞장, 방화, 소모 없는 고도의 시민 자치가 실현됐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한 것이다. ‘광주다운 광주’라고 말할 때 이런 광주 정신에 대한 높은 자부심이 내포돼 있다. 5·18의 전국화, 세계화는 광주 정신의 확산, 공유를 뜻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제3세계 민주화에 기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의미가 크다. 광주와 세계 각국의 도시와 사람간 연대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홍콩과 캄보디아에서는 5·18 상징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려지고 있다. K팝으로 세계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이 5·18을 노래하자,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5·18을 공부하면서 ‘I know 5·18’ ‘광주시민을 존경한다’고 응답할 정도다. 광주 정신이 인류 보편의

자유, 평등, 평화, 생명 사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청신호다. 광주 정신이 5·18 때 갑자기 응축되어 분출된 것은 아니다. 멀리 동학 혁명과 한말 의병과 맞닿아 있다. 전라도 의병들은 ‘죽어야 의병’이라며 결사항전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 학생독립운동 역시 일제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결사 항쟁을 벌였던 전국적, 세계적 학생독립운동이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항일 비밀 결사 조직 성진회의 장재성, 장석천 등이 투쟁 역량을 비축해 터뜨린 학생독립 투쟁이었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는 비장한 광주 학생독립운동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의 뿌리다. 광주 정신은 과거의 빛바랜 훈장이나 박제된 역사가 아니다. 남북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추동하는 역사의 동력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명과 평화의 문명으로 대전환을 주도할 인류 평화 사상이다. 만약, 5·18 당시 광주가 불의한 권력에 결사 항쟁이 아니라, 투항·항복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거나 계승할 광주 정신은 없다. 광주 정신을 계승할 때 역사는 진보한다. 광주 정신은 인류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社說

방사광가속기 호남 유치 열기 뜨겁다

방사광가속기로 인해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나주를 비롯해 포항·춘천·청주 등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그제 국회 본관 앞에서 범국민 서명 230만 명 돌파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달 31일 온·오프라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230만 명을 넘어서며 국토 균형 발전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위한 열망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치위원회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충청·영남 편중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광가속기를 호남권에 구축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방사광가속기(放射光 加速器)는 일종의 거대한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대규모 과학 실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입자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방사광을 방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4

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과학뿐 아니라 첨단 신산업과 기존 사업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도 방사광가속기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지자체들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열을 올리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유치하면 무려 6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호남 유치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보면 시설 접근성과 배후도시 등 입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뭔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호남 유치를 위해 20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지만 서명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했다.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호남 유치를 위한 독특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00일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을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어제부로 100일이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위기를 잘 극복해 지금은 통제 가능한 국면에 들어섰다.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감염 제로’와 인구 대비 최저 발생률 유지를 힘을 보탤다. 광주시는 지역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정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시스템으로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50일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어제까지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인데, 지난달 8일 이후 발생한 15명은 모두 해외 유입자이거나 관련자다. 전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이 0.8명에 그

쳐 전국에서 가장 낮다. 국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은 20.71명이다. 전남은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2.6%로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도 확진자가 제주도(13명)를 빼면 가장 적다.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올 가을·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잊따르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은 여행이나 모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등교 개학과 ‘생활 방역’ 전환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대응과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최근 이동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생활고 시위’로 이어진 폭동·소요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식량과 생필품 사재기도 극성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은 방역 모범국으로 자칭되며 한국의 방역 모델인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중국과 함께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혔던 대한민국이 고유의 방역 시스템인 ‘K방역’을 전 세계로 홍보하고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던 세계 각국들은 앞다퉈 K방역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법은 세계 각국의 표준 모델이 됐다. 무엇보다 이동 제한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방역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과 생필품 사재기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모델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대량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과 신

속한 환자 분류 체계, 감염 경로 추적과 투명한 공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사회적 거리 두기와 높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개발한 진단키트는 이미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지 100일을 맞았다.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은 K팝과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 함께 새로운 한류(韓流)로 떠올랐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있다. 조심스럽게 일상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K방역을 넘어 한국민들의 일상이 ‘K일상’으로 또 다른 세계 표준과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9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